metr⊕ 정치·정책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13** 

## '망 무임승차' 등 ICT 현안 산더미 정치공세에 '조국 국감' 변질 우려

#### 과기정통부·방통위 국감 스타트

20대 마지막 국감…공방 불 보듯 조국 의혹 관련 증인 수두룩 현안 뒷전… 조국 공방전 절정

정보통신기술(ICT) 국감이 '조국이 슈'를 중점으로 정치 공방에 휩싸일 전 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 간 정치적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 다. 당장 눈앞에 산적한 정보통신기술 (ICT) 현안이 뒷전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10월 2일 과 4일에 각각 과확기술정보통신부, 방 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올해 국감의 뜨거운 현안으로는 '망 무 임승차' 이슈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기 업 역차별, 가짜뉴스, 유료방송 인수·합 병(M&A) 등이 후보로 꼽힌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 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 송통신위원회 소관 국정현안 및 운영 실 태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자리다. 이를 통 해 입법, 예산·정책심사에 반영하고 개 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를 하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정책 현안은 산적해 있다. 특히 상용 화된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 및 요 금, 통신·방송간 M&A에 따른 유료방 송 시장의 변화,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소송 문제 등이 꼽힌다.

5G의 경우 지난 4월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후 서비스 시작 4개월 여만에 2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과제는 5 G 통신품질 고도화와 5G 요금제다. 쓸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해 앉아 있다. /뉴시스

만한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방송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등 M&A 따른 유료방송 시장 지각 변동에 대한 질의가예상된다. 다만, 이동통신 3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CEO에 대한질책성 질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에서는 CEO 대신 오성 목 KT 사장과 최택진 LG유플러스 부 사장,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 터 센터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 관련 질 의에 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글로벌 인터 넷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문 제가 집중 질의될 예상이다. 실제 채택 된 증인 중에서는 국내 양대 포털 대표 와 글로벌 IT 기업 관계자들이 눈에 띈 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 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윤 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한성숙 네이버 대표 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도 망 사용 료 실태 관련 및 국내외 콘텐츠제공자 (CP) 역차별 등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 됐다. 국내 CP들인 박태훈 왓챠 대표와 이태현 웨이브 대표도 명단에 올랐다.

가짜뉴스도 '뜨거운 감자'다. 최근조 국 법무부 장관 관련, 양 진영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경쟁을 펼쳐 인터넷 포털 실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제기가 이어져 산적한 정책 현안들이 묻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의원들의 정치적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 의혹과 관려된 증인들이 채택됐다. 문용식 한국정보화 진흥원장,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 박윤영 KT기업사장 부문장, 박중훈대 구지방조달청장 등이다. 이들은 조국 장관 즉 사모펀드 투자 관련, 버스 와이 파이 사업을 두고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미분양 늘고 집값 담합·전세금 사기까지 여야, 부동산 개혁 한목소리

'짐값 담합' 98% 수도권 초집중 모호한 처벌 기준에 실효성 의문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주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은 문재 인 정부 국정운영 감시·평가에 열을 올 리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부동산을 이용한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개혁' 요 구가 잇따르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1일 정치권이 지적한 부동산 시장·업계 문제점을 짚었다.

#### ◆집값 담합에 공시가격 집단 항의까지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값은 올라가고, 지방 미분양 물량은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담합은 물론 공시가격에 대한 집단이의신청으로 재산세까지 절감하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후삼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감 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집값담함 신고 센터'가 접수한 담합 의심 행위는 총 162건이다. 이 중수도권에서 발생한 사 레는 159건으로 전체 98%를 차지했다.

집값 담합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 인 중 하나로 꼽힌다.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준 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 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와서울시의 공시가인상 으로 세 부담이 커진 가구도 증가했지 만, 반면 집단 항의로 공시가격을 낮춰 세 부담을 줄인 지역도 나타났다.

올해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까지 오른가구는 28만847가구다. 지난해대비 2배, 2017년과 비교해 5.6배 늘었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거둔 재산세는 2747억81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재작년보다 9배 증가했다.

반면 서울 지역 초고가 아파트에 거 주하는 주민 일부는 정부에 항의해 공 시가격을 무더기로 낮췄다. 정부가 공 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면서 가구당 최 소 3만원에서 최대 90만원의 재산세를 아꼈다.

#### ◆건설업계 실적 저조

건설업계 난국도 이어진다.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은 해마다 내리막을 걷고 있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집을 지을수록 빚이 늘고 있다.

김상훈자유한국당의원이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16년 72만6048호에서 지난해 55만4136호로 줄어든 뒤 올해는 7월 말 기준 25만4168호에 그쳤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도 2016년 46만 9058호에서 올해 7월 16만5977호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실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LH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선 정부 단가 지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한채당총부채는 1억2500만원이다. 행복주택한채 건설 시에는 총8800만원의부채가 생긴다. 매입임대주택한 채를매입할때 생기는 부채도 9500만원이다.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지원 단가를 낮게 책정했기때문이다.

#### ◆중개업계도 비위 투성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등록 임대 사업자의 의무 준수와 임차인 권 리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하는 임대 사업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규정 위반은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지난해 674건이다. 부과한 과태료도 2015년 3억6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920만원, 2017년 24억 1801만원, 지난해 53억5714만원까지 늘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등을 적용하면서 혜택만 받고 의무는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석대성기자 bigstar@

## "DMZ, 경제특구로 만들어 '평화경제시대'" 상용직 369만원 벌때

#### 文 19기 민주평통 출범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9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앞장서 열 고 계신 자문위원들을 뵈니 참으로 든 든하다"고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 민 주평통은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직속자 문기구로, 평화·통일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의장인 대통령에게 건의·자문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 대통령은 19기 민주평통 출범식 모두발언 때 "19기 민주평통은 더 많은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과감한 변 화를 시도했다. 역대 최초로 실시된 '국민참여공모제'를 통해 평화와 통일 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국민들 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여성과 청 년의 참여비율도 대폭 늘어났고, '통일 공공외교'를 담당할 해외 자문위원 위 촉 국가 수도 사상 최대인 124개국에 달한다"고 이렇게 격려했다. 이어 "이 제 국민들은 지역과 성별, 세대, 각계 각층을 아우르는 민주평통을 통해 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청와대 영빈관에 서 열린 제19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 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뉴시스

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제평화지 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 지역은 국제적 경제특구를 만들어 본 격적인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갈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경제는 70년 넘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서로에 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시대를 여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2032년 서울·평 양 공동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 위에 남북의 협력과 단합을 세계에 선포하 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 상용직 369만원 벌 때 일용직 151만원 벌었다

임금격차 지난해보다 늘어

지난 7월 상용노동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각각 369 만3000원, 151만6000원으로 격차가 217 만7000원까지 벌어졌다. 상용직과 임시 직 격차는 지난해 같은달(216만원)보다 늘었고, 지난달 기준 상용직·임시직 격 차인 200만4000원보다도 증가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상용직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총액은 348만 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9만 6000원) 증가했다.

상용노동자 임금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 늘어난 369만3000원, 임시• 일용직 노동자는 전년 동월대비 5.6% 증가한 15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상 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217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216 만원보다 확대됐다. 지난 6월 상용직• 임시직 격차인 200만4000원보다도 확 대됐다.

/손현경 기자 son89@

## "아파트 부정청약, 1년 반동안 730건 넘어"

경기도 313건 최다… 부산, 서울 順

최근 1년 반 동안 적발한 부정청약이 73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 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 정청약 의심 사례로 지난해 609건, 올 해는 8개월간 125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67건, 서울 46 건, 대구 35건 순이다. 경기도 내에선 하남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당 5건, 광명 2건 등으로 투기과열지구 중심으로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최근 분양 브로커를 검거한 부산과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대구 수성구

또한 부정 의심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서울 내 부정청약 적발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영등포 보라매 SK뷰가 15명 으로 가장 많았다. 또 송파 헬리오시티 도 6명, 동작 흑석아크로리버하임 5명, 반포 아크로리버하임 2명 등으로 이어 졌다. 모두 이른바 '로또청약'이나 고 분양가 단지다.

한편 부정청약 적발 중 취소는 10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609건 중 60건, 올해는 125건 중 9건의 계약이 취 소됐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과 대리청약, 허위소득·출생신고, 위조등수법 또한다양해지고 있는만큼관계부처는선제적부정청약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